

제32차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연례회의 참석 결과

□ 개요

○ (일시/장소) '25.10.2(목)~10.9(목)* / 인도네시아 발리

* 출장 일정: 10.1(수) 인천 출발, 10.11(토) 인천 도착

○ (참석자) 한국, 일본, 호주, 뉴지, 대만, 인도네시아, 남아공 등 약 50명

* (한국대표단)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나일강 주무관(수석대표), 동원수산 주정일 부장, 원양협회 백상진 대리, 협력센터 양재걸 전문관

○ (주요의제) 회원국 이행평가, '27~'29년 남방 참다랑어 총허용어획량 및 회원별 할당, 인도네시아 할당 증가 제안, '26년 예산 및 분담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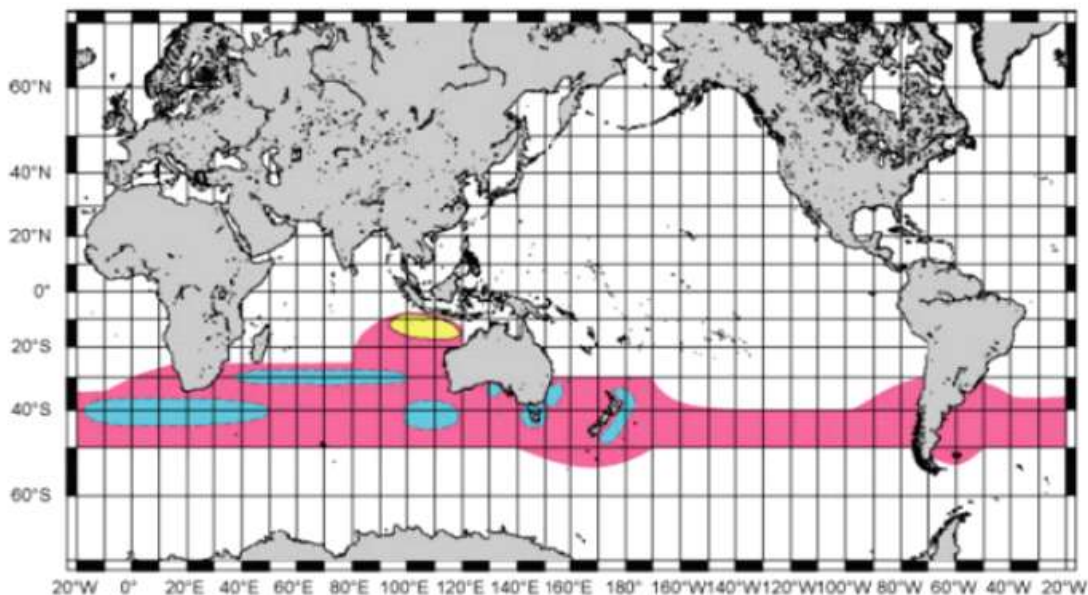
□ CCSBT* 개요 *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Southern Bluefin Tuna

○ 협약 발효 / 한국 가입 : '94.5.2 / '01.10.17

○ 회원국(8) : 한국, 일본, 호주, 대만,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남아공, EU

○ 관리어종 / 대상수역 : 남방 참다랑어 / 남방 참다랑어가 회유하는 수역*

* 대서양, 인도양 및 태평양 남위 30도 ~ 50도에서 서식 및 회유



○ 회원별 어획한도(톤수)

회원	2018~2020 ¹⁾	2021~2023 ²⁾	2024~2026 ³⁾
일본	6,117	6,197.4	7,247
호주	6,165	6,238.4	7,295
한국	1,240.5	1,256.8	1,468
대만	1,240.5	1,256.8	1,468
뉴질랜드	1,088	1,102.5	1,288
인도네시아	1,023	1,122.8	1,336
남아공	450	455.3	527
EU	11	11	13

- 1) 일본이 인도네시아에 제공하는 21톤과 남아프리카에 제공하는 27톤의 자발적 이전 포함
- 2) 일본이 인도네시아에 제공하는 21톤과 남아프리카에 제공하는 27톤의 자발적 이전, 호주가 인도네시아에 제공하는 7톤의 자발적 이전, 인도네시아에 대한 80톤의 특별 임시 할당 포함
- 3) 일본이 인도네시아에 제공하는 21톤의 자발적 이전과 남아프리카에 제공하는 27톤의 자발적 이전 포함. 인도네시아에 대한 130톤의 특별 임시 할당 포함

□ 이행위원회

1. 회원 이행평가

○ 회원별 주요 불이행 및 소명

구분	불이행	소명
인니	• 옴서버 의무 승선율(10%) 미달	• 옴서버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해 발생 • 옴서버 제도 변경 중: 비용은 업계가 부담하고 관리는 외부업체에 위탁
	• 조업일지 요구사항 불이행	• 해상에서 전자 로그북의 잦은 고장 • 선장들이 전자 로그북 사용에 미숙하여 교육 시행 예정
	• 어획증명제도(CDS)에 따라 보고된 수출량/재수출량이 어획량을 초과	• 국내 시스템 미비로 발생하였고 예산 부족으로 당장 개선이 어려운 상황
	• 부수어획종 관련 데이터 및 저감조치 사용에 관한 정보 미제출	• 데이터 수집에 지연이 있었고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중

남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획모니터링 서식(CMF)과 어획태깅 서식(CTF) 내 정보 불일치들이 지속 • 선박에 대한 사후 조업 허가 부여 • SBT 양륙에 대한 검색 보고서 미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착오, 인력과 역량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였고 인력과 역량 강화를 통해 개선 노력 중
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지는 24년에 전자감시(EM) 모니터링으로 전환하였으나 오피서버 승선율(10%) 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미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에 모든 SBT 조업선에 EM이 설치되었고 EM 데이터를 CCSBT 시스템에 전송하는 작업이 필요. 24년에 10% 이상 충족했음을 확신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닷새 저감조치* 요구사항(3개 중 2개 이상 사용) 불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장 교육을 다시 할 예정이고, 양륙 항구에서 저감조치 관련 검색을 강화할 계획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닷새 저감조치 요구사항(3개 중 2개 이상 사용) 불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선박들이 야간 투승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고, 불이행에 대해 행정 제재금을 부과할 예정

* 1) 토리라인 설치 2) 무게추 사용 3) 야간 투승

○ 기타 논의내용

- 이행위는 EM이 조업 데이터 수집 및 바닷새 어획량 추정 개선에 위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으나 사람 오피서버에 비해 바닷새 종 식별에는 취약할 수 있음을 주목하였음
- 뉴지는 바닷새 혼획 위험이 큰 해역들에서 SBT 목표 연승선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제안서를 내년에 제출할 수도 있음을 언급하였음

2. 전자 어획증명제도(eCDS)*

* 어획증명제도(Catch Documentation Scheme): 어획물의 합법적인 어획 및 유통을 보장하기 위해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주요 단계에서 어업인, 당국자, 수입자 등이 보고, 검토, 인증 및 확인을 하는 제도. 참다랑어의 경우 대서양 참다랑어는 전자적 제도 시행 중, 태평양 참다랑어는 전자적 제도 개발 중

○ 논의배경

- 기존에 문서로 시행하던 CDS를 26.4.1부터 전자적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고 금년 두 차례 작업반 회의를 통해 “CCSBT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결의” 최종 텍스트를 논의하였음

○ 논의결과

- 모든 회원들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음
- 일본은 모든 회원들이 동시에 eCDS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SBT 주요 목적지인 일본에서 SBT 수입 시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모든 회원들이 동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시행 1년 연기를 제안하였음
- 결의는 금년 채택하고 결의 내용에 따라 시행 준비를 하여 27.4.1부터 eCDS를 시행하기로 하였음

3. CCSBT 이행 계획 및 이행 조치 계획

○ CCSBT 이행 계획(Compliance Plan)

- 이행위는 CCSBT 이행 계획의 목적은 회원들의 이행 개선을 위한 틀을 제공하고, 작년 이행위에서 채택된 이행 조치 계획(CAP)의 이행, 검토 및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도구임을 확인하였음
- 회원별 CCSBT 조치 불이행의 상이한 정도에 대한 상호 비교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공해어업협정에 명시된 ‘심각한 위반’에 대한 정의를 참조하여 불이행 빈도와 심각성에 초점을 둔 위험 관리 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CCSBT 이행 조치 계획(Compliance Action Plan)

- CAP 내 불이행 유형들과 유형별 위험 수준이 현재의 CCSBT 조치별 불이행에 따른 위험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논의하였고 위험 등급들을 재검토하고 개정*하였음

* CDS, 폐사량 보고 및 차감, 전제 요구사항 불이행을 모두 높은 위험 등급으로 변경

- 이행위는 불이행 유형별 세부 조치 계획에 대한 논의는 매우 기술적 성격의 논의이므로 이를 위해 26년 초 별도의 이행기술 작업반 회의 (TCWG)를 화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음

○ 기타 논의내용

- 사무국은 CCSBT 주요 감시·감독·통제(MCS) 조치들 관련 운영 사항에 관한 요약을 제공하였음
- CDS 이행 관련 주요 어려움 중 하나는 단일하지 않은 가공 코드 및 변환계수의 사용으로, 이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CDS 내 보고된 서식 간 어획량 비교를 어렵게 하고 있음. TCWG에서 추가 논의를하기로 하였음
- 미국과 중국으로 SBT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미국은 자발적으로 CDS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기타 계속되고 있는 이슈: 인니와 남아공의 사후 조업선 등록, 양륙 또는 전제 선박에 대한 항구검색 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미준수

□ 총회

1. 인도네시아 할당 증가 제안서

○ 논의 배경

- 인니는 최근 수년간 계속적으로 자국 할당 증가를 요청하였음. '24년

총회에서 회원들은 '25년 총회 이전 회원들이 인니 요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25.8.1까지 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인니는 요청대로 문서를 제출하였음

인니 문서 주요내용

- 1) 인니는 SBT가 회유하는 해역 내 가장 큰 국가이고, 산란장을 가진 연안개도국임에도, 어획능력, 사회경제적 필요에 비해 너무나 적은 할당을 갖고 있음
- 2) 인니는 MCS를 포함하여 보존관리조치 준수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 3) 타 회원들은 미소진 쿼터를 이월하고 있으나 인니는 부족한 할당으로 인해 발생한 초과어획에 대해 반납하고 있음
- 4) 현재 인니 할당은 유엔해양법협약, 공해어업협정, CCSBT 협약 등 국제규범에 명시된 형평성에 반함

○ 논의 경과

- 할당 증가 논의는 사안의 성격을 고려하여 본회의를 정회하고 수석대표회의를 통해 진행되었음. 인니는 수석대표회의에서 자국이 원하는 할당 증가 수치들을 제시하였음

[인니 할당 증가 제안]

구분	기존	변경	증가율
옵션1	할당비율 5.7785% (1,366톤)	할당비율 15% (3,547톤)	약 160%
옵션2	1,366톤	3,000톤	약 120%

- 회원들은 인니 할당 증가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으나 제안된 수치가 기존대비 너무 급격한 변경이므로 수용하기 어렵고, 할당 증가 이전 인니의 조업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 인니는 “자국 입장은 분명히 했고 이제는 회원들이 논의해서 입장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회의장을 퇴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음

[회원들 주요 의견]

회원	주요 의견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니의 초과어획 반납 등 불이행 이슈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함 • 현재 업계에 대한 영향 최소화, 기존 투자에 대한 존중 필요 • 할당은 연안개도국 지위 외에도 과학조사 기여, 역사적 어획, 자원회복 노력 등도 고려되어야 함 • 할당 변경은 장기적으로 점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임시로 특별 할당도 고려할 수 있음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니 어획은 대부분 공해에서 이루어지므로 원양선단의 어획과 유사한 성격이나, 인니는 원양선단과 같은 수준의 MCS 조치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음 • 연말까지 인니가 제출하는 시정조치 상세계획을 먼저 본 후 추가 할당을 검토할 수 있고 현재로서는 인니가 제안하는 수치를 수용할 입장이 아님 • 현재의 할당은 과거 자원회복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한 회원들의 노력과 어려운 협상의 결과로서 일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음 • 매번 새로운 쿼터블록을 논의할 때마다 연안개도국들에 대한 고려를 해왔음. 이 점이 무시되어서는 안됨
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T는 공유자원으로 타협이 필요하고 역사적으로 형성된 할당이 존중되어야 함 • 인니의 초과어획 반납이 완료되어야 하고 24년 한도 준수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음. 한도 준수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함 • 인니의 불이행 이슈들에 대한 조치계획을 먼저 검토해야 함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미소진 쿼터 이월은 초과어획 방지를 위한 유보량 설정으로 인한 것으로 유보량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선박 척수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 모든 회원들은 쿼터에 상응하는 척수를 유지해야 하나 인니는 쿼터에 상응하지 않게 선박 척수를 증가시켜 왔음 • 인니가 가입하기 전 본 기구 회원들은 많은 과학조사 기여, 자원관리 노력, 어획 노력 감축, 재정적 기여 등을 하였으므로 현재의 할당은 어느 정도의 공정성은 있다고 볼 수 있음 • 지난 10년간 한국은 할당이 약 310톤 증가한 반면 인니는 동 기간 약 600톤 증가하였음. 위원회는 인니에게 유연성을 보였고 고려를 해왔음 • 인니가 제안하고 있는 할당 수치(15%, 3,000톤)가 도출된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되어야 함 • 인니 선단의 주된 어획 장소가 영해나 EEZ였다면 인니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나 인니 선단의 주된 어획 장소는 공해임 • 인니가 제공한 해역별 어획 정보에는 중량이 표시되지 않아서 검토를 하기에 불충분함. 한국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요청한 이 정보를 제공해 주기 바람 • 인니에 대한 추가 할당은 27-29년 쿼터블록에 대해서만 논의할 수 있고 30-32년 쿼터블록은 논의 대상이 아님

<p>남아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당은 국제규범에 부합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연안개도국의 개발 열망이 고려되어야 함 • 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연안개도국들에 대한 할당이 점진적으로 증가되어야 함 • 할당 변경이 관리절차 이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초과어획 반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됨 • 남아공도 연안개도국으로서 인니를 배려하기 위해 전체적인 할당 불균형 해소가 후퇴해서는 안됨
<p>대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할당은 역사적 어획, 어획 능력, 경제적 필요, 자원보존 등이 고려되어 결정된 것으로 한 회원의 필요에 의해 이를 급격히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함 • 대만도 인니 못지 않게 많은 선박을 갖고 있고 우리 업계는 사업 지속가능성이 우려될 정도로 힘든 상황임
<p>인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과어획 반납, MCS 개선에 대해서는 이행위에서 발표하였고, 연말까지 상세 계획을 제출할 예정임. 회원들은 불이행만을 지적하고 불이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논의하려고 하지 않음 • 과거 발생한 초과어획은 부족한 할당으로 인해 발생하였음 • 우리가 요구하는 할당 수준은 우리의 어획능력에 상응하는 것으로, 능력을 초과하는 할당을 우리는 요구하지 않음 • 현재의 할당은 연안개도국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다른 국제기구에서도 이를 인정했고, 역사적 어획에 의한 할당을 유지하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이 아님

○ 논의 결과

- 본 회의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고, 뉴지 제안에 따라 인니 할당을 논의하기 위한 회기간 회의(26년 초, 화상)를 개최하기로 하였음
- 인니는 이행위 결과에 따라 자국 조업관리 개선계획 및 한국이 요청한 해역별 어획정보를 연말까지 제공하고, 회원들은 이 정보들을 검토한 후 회기간 회의에서 추가 할당을 고려
- 인니는 이 회기간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할당 수치가 논의되어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한 번의 회의로 논의가 끝나야 한다고 하였음.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도 자국 할당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의 할당 논의는 하지 말아야 하고, 인니는 향후 모든 TAC 증가에 반대할 것이고 CCSBT 탈퇴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음

2. 총허용어획량(TAC) 및 할당

○ '26년 TAC 및 할당

- 총회는 '26년에 TAC를 변경할 비상상황이 없다는 과학위원회 권고에 따라 관리절차에 따른 기존 '24-'26년 TAC(20,647톤)를 유지하기로 하였음
- 총회는 인니에 대한 130톤의 특별 임시 할당을 '26년에도 유지하기로 하였음

○ '27~'29년 TAC 및 할당

- 총회는 '27-'29년 TAC 논의를 금년에 하지 않기로 하였음

□ 재정행정위원회

1. 26년 위원회 예산 및 분담금

○ 논의배경 및 경과

- 사무국은 26년에 위원회 및 하부위원회에 의해 요청된 활동을 모두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담금 5%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가장 큰 지출 증가 항목은 유전자 태깅 프로그램으로, 작년 재정위에서 예산 부족으로 중단하기로 결정되었으나 금년 과학위에서 본 프로그램의 재개를 강력히 요청하였음*

* (과학위 의장) 유전자 태깅으로 수집된 데이터가 치어 풍도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데이터로서 이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수집하여 관리절차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가장 신뢰성이 낮은 CPUE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다음 쿼터블록(28년~) TAC 조안은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음

- 인니는 자국의 어려운 예산 상황과 개발된 회원들 대비 불공평한 자국 분담금을 언급하며 분담금 5% 인상 수용이 불가하다고 하였음

- 사무국장은 협약 11조 2항 (a)에 따라 어느 회원이 분담금 인상을 수용하지 않으면 나머지 회원들의 분담금 인상도 불가하다고 하였고 26년 각 회원 분담금은 25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음
- 이로 인해 26년 활동들에 대한 예산 감축이 필요하였고 회원들은 과학 예산 중 유전자 태깅 프로그램과 ERS 작업반 대면회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음
- 뉴지는 작년에 결정된 대로 유전자 태깅 프로그램 중단을 주장하였고 다른 회원들은 모두 프로그램 재개를 희망하였음

○ 논의결과

- ERS 회의를 화상회의로 동시에 개최하기로 하고 호주가 회의 비용을 위한 기여금을 제공하기로 하고, 뉴지도 이를 수용하여 유전자 태깅 프로그램은 재개하기로 하였음

[26년 위원회 예산 및 한국 분담금]

구분	2025년	2026년	비고
위원회 수입*	AUD 4,050,920 (약 37억 7,262만원)	AUD 4,343,810 (약 40억 4,539만원)	전년비 약 7.2% 증가
위원회 지출	AUD 3,988,400 (약 37억 1,439만원)	AUD 4,423,700 (약 41억 1,979만원)	전년비 약 10.9% 증가
한국 분담금	AUD 286,732 (약 2억 6,703만원)	AUD 286,732 (약 2억 6,703만원)	전년과 동일

* 위원회 수입에는 회원 분담금 외 자발적 기여금이 있음

2. 차기 회의

- (일시/장소) 26.10.1~10.8 / 벨기에 브뤼셀